

“전국의 각분야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명이 모니터하는 18년 전통의 NGO종합모니터단”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정감사 기간중, 국회내 총괄사무실 겸 화상 모니터실 --- 국회본관 250호실 전화: 788-2621, 2622

(우) 06708 서울시 서초구 명동로 52-9 소강빌딩 (T) 02) 523-8760~7 (E) goodlaw@goodlaw.org 총괄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절반을 바꿨어도 원칙도, 대화와 타협도 없는 20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은 참담할 뿐이다.

2016 국정감사 중간 성적은 F학점

- 국정통제 등 4대기능 종합판이며, 헌법상 책임인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여당(새누리당)의 반의회, 반민주, 무책임을 통탄
- 일축즉발의 핵 미사일과 지진·물난리·총파업 앞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몰입해 정작 민생·정책은 뒷전이고, 증인채택 정쟁으로 주파야감하면서 피감기관과 국민을 능멸한 거대야당의 반민생, 반민주, 무능력을 통탄
- 국감법에 30일을 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20일로 줄여서 하는 것도 모자라 19일까지 기간을 늘려줘도 서둘러 일찍 국감을 마감하는 한심한 국회
- 감사도 안하면서 피감기관을 불러 놓고, 국감진행여부와 증인채택 논란으로 정쟁을 하고, 배석자가 전해주는 쪽지까지 압수하며 피감기관을 죄인취급 모욕·호통 여전

1. 지난 제15대 국회말부터 18년 동안 서울은 물론, 부산 제주 전주 세종시 등 전국의 국감현장을 밀착 모니터해 온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상임공동단장 김대인 외 20인)은 제20대 국회 1년차 국정감사를 온·오프라인 모니터하여 10월 7일(금)까지 절반의 국감성적을 통탄스런 ‘F학점’으로 평가하며(이는 모니터를 시행한 18년만에 초유의 사태임), 국정감사 기간연장(국감법대로 10. 25일까지)을 통한 보충국감을 촉구한다. <<적어도 2017년부터는 국감법대로 30일동안 충실국감을 강력촉구함>>
2.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가가 곧 법이요 법이 곧 국가다. 입법을 잘못하고 법집행을 잘못하면 국가와 법이 국민기본권 침해, 국가불신, 국민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며, “특히 「청금법(청탁금지법)」은 애초의 취지를 넘어서 5천만 국민의 윤리도덕까지 형벌로 다스리려는 것으로 국가가 도덕선생이 되면 국민은 질식하다가 저항하게 된다.--그럴 듯하지만 아주 나쁜 법으로 변질시켜는 국회가 막상 그 부작용이 심각하고 국민불만이 커지자-- 국정감사에서 근본해법제시보다 국민권익위에 책임전가하는 행태는 무책임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국정감사 기간만이라도 협치로써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예측가능한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피력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문의 : 홍 금 애 공동집행위원장, 윤 소 라 사무국장, 02-523-8760~7>>

비록 늦게나마 정상화됐지만 국감 중반 평점으로 F학점을 줄 수밖에 없는 사유

- 국정통제 등 4대기능 종합판이며, 헌법상 책임인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여당(새누리당)의 반의회, 반민주, 무책임을 통탄
 - 국정감사제도는 1987년 현행헌법에 의해 민주화의 산물로 부활된 소중한 유산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말하면서 국정감사를 일주일씩이나 무력화시킨 것은 역사적 오명임.
 - 헌법상의 권한인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것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국정을 감시 통제하는 책무를 포기한 것으로 집권여당의 무책임을 드러낸 것임.
- 일축즉발의 핵 미사일과 지진·물난리·총파업 앞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몰입해 정작 민생·정책은 뒷전이고, 증인채택 정쟁으로 주파야감하면서 피감기관과 국민을 능멸한 거대 야당의 반민생, 반민주, 무능력을 통탄
 - 국정감사는 안보불안, 민생불안, 경제불안, 일자리 불안 등을 해소하도록 박근혜정부의 정책난맥상이나 예산낭비, 부정부패를 드러내 정책을 바로 잡고 올바르게 인도하는 일인데, 국민의 선택으로 거대야당이 되었음에도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해소를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함.
 - 국정감사 정상화 이후에도 낮에는 파행을 하면서 밤에 국정감사를 하는(주파야감) 행태로 국민을 피로케 하고 피감기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소홀히 하여 야당의 무능을 드러냄.
- 국감법에 30일을 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20일로 줄여서 하는 것도 모자라 10. 19일까지 기간을 늘려줘도 서둘러 국감을 마감하는 한심한 국회
 - 국정감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30일 이내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규정이 도입된 2012년 3월 이후 한 번도 30일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20일 이내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이번에는 집권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인해 여야당 원내수석이 합의를 하여 국정감사를 4일 연장하기로 하여, 19일이 아니라 25일까지는 국정감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일 밖에 연장을 하지 않았음.
 - 각 상임위원회는 반쪽국감을 해소하기는커녕 지방국정감사를 취소해 10월 15일까지 국정감사를 끝내는 것으로 조정하였을 뿐이고, 국정감사를 전혀 하지 못한 법사위와 정무위만이 10월 18일까지 감사일정을 편성하였음.
 - 국감장에서는 감사위원들이 질의시간이 부족하여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질의를 하고 있음에도, 반쪽국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국회에 대해 국민들은 깊은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낌.
- 감사도 안하면서 피감기관을 불러 놓고, 국감진행과 증인채택 논란으로 피감기관 앞에서 정쟁을 하고, 피의자도 아닌 피감기관을 죄인취급 모욕·호통 여전
 - 국감초반 1주일동안 국회는 감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피감기관을 불러다 놓고 사회권 논쟁 등 국정감사를 진행할 지에 대한 정쟁을 벌임
 - 피감기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명확한 증거와 자료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며 피감기관을 죄인취급하면서 배석자가 전달하는 쪽지까지 압수하며, 휴식도 주지 않는 위원회도 있었음.
 - 증인채택 논란으로 낮에는 파행을 하면서 감사를 하지 않다가 밤중에 감사를 하고 자정을 넘겨서 강제에 가까운 동의를 구해 국감을 진행함.

2016년도 국정감사 중간 성적은 F학점

I. 2016년도 첫 국정감사의 절반 평가 총평

여야당 치킨게임¹⁾으로 국정감사까지 정치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공학적 행태는 ‘갑질’ 국회의 전형적 모습, 역사적 오명 F학점은 18년 모니터사상 초유, 재수강처럼 재감사·추가감사 해야 국감다운 국감 없는 20대 첫 국정감사에 분노한다

1. 국정감사 직전 9월 24일 심야에 벌어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따른 집권여당의 국회 전체일정 보이콧²⁾,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국감 강행, 국회의장 사퇴촉구안 제출(9.27.), 여당 당대표(이정현)의 단식 등 여야간의 정치공학적 ‘기’ 싸움으로 인해 중차대한 헌법상 권한인 국정감사(국정감사의 특징인 국정감사의 정기성, 포괄성, 공개성,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파행, 반쪽 국감으로 전락시켜, 국정감사를 사실상 무력화하였다.

2.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은 김재수 장관해임건의안의 절차문제를 들고 나와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조기 레임덕을 막았고, 국정감사의 예봉을 무디게 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파행으로 의회민주주의사에 오명을 남겼고, 민심이반을 시켰다는 평가이다.

다수(野大)인 야 3당은 여당의 국감 보이콧에 맞서서 단독 국정감사 강행이라는 강수를 두었으나, 정작 국정감사장에서는 감사의 창을 청와대에만 겨냥 국정감사는 몇몇 이슈에 몰입되고 말았다. 그 결과 철저한 증거자료에 의해 국정전반을 비판하고 정책을 점검하는 데 실패하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1) 치킨(chicken)이란 명칭은 두 사람이 충돌을 불사하고 서로를 향해 차를 몰며 돌진하는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의 게임에서 유래한다. 제임스 딘(James Dean) 주연의 1955년 영화인 <이유 없는 반항(Rebel without a Cause)> 에도 잘 묘사되어 있다. 둘 중 하나가 차의 핸들을 쥐지 않으면, 결국 충돌해 둘 다 죽는다. 만일 둘 중 하나가 핸들을 쥐으면, 다른 운전자는 승리가 되며 둘 다 죽을 이유도 사라진다. 이 경우 핸들을 쥐은 사람은 치킨(chicken)이 된다. 즉 치킨이 겁쟁이(coward)란 뜻이다. 치킨 게임의 정치학 분야 버전은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협상에서 북한이 자주 구사해 온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이다. 역사적으로는 과거 미국과 소련(Soviet Union, 옛 러시아) 간의 핵무기 감축 협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바 있다.(이한영, 상식으로보는 세상의 법칙 : 경제편)
2) 엄밀히 말하면 ‘보이콧(boycott)’보다는 ‘파업(스트라이크)’라는 용어가 합당할 것이다. 하지만 국감조반부터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한다.

3. 9월 30일까지 1주차에서만 대법원, 감사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금감원, 국제청, 경찰청 등 힘 있는 국가기관을 비롯하여 무려 98개 기관이나 국정감사가 실시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 피감기관이 국감장에 있다가 감사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국가적인 낭비가 초래되었다.(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구실로 밥값까지 제한하면서)

또한, 국감실시 여부에 대해 여야의 갈등이 증폭되어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으며,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소속 위원장이 당론에도 불구하고 국감진행을 하거나, 사회권을 넘겨받지 못한 채 야당의 단독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사태를 초래했다.

4. 그리고 1주차에서만 137개 기관에 대해 반쪽 국감이 실시되어 이 국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의문시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소속 위원장인 외교통일위, 교문위, 농림위, 산업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등은 새누리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어 감사다운 감사라고 볼 수 없었고, 기상오보, 지진사태 등 부처의 주요현안보다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대통령 측근과 관련된 사안에 집중되어 국정감사의 본질을 사라진 것도 문제였다.

시간이 없었다면 남은 기간에 추가해서라도 국정감사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임에도, 여야는 19일까지 국감 연장을 합의하였지만 반쪽국감에 대해 추가 국감을 실시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더욱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5.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복귀 선언으로 10월 4일부터 형식적으로 국정감사가 정상화되었으나, 내용적으로는 파행이 계속되었다. 특히 제19대 국회에서 거듭된 파행으로 인해 불량상임위원회로 지탄을 받았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제20대에서도 여전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의 증인채택문제로 파행을 거듭하였다. 교문위는 낮에는 파행을 일삼다가 밤이 되어서야 감사를 시작하는 ‘주파야감’을 하면서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국정감사를 계속하였다.

여소야대의 국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증인신청 채택은 되지 않아 미방위나 교문위의 야당 국회의원들은 증인채택을 위해 기자회견을 하는 등 국정감사 외적인 문제에 집중하였다.

6. 교섭 3단체 지도부가 국정감사를 등한시하는 것도 계속 큰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북한핵 불안 등 안보위기 상황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상호 더

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장에 시중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질의할 때만 참석하고 질의 후에 자리를 뜨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당대표인 이정현 의원은 1주차 단식 이후 2주차 교문위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국내반 이틀 중 하루 참석해서 인사만 하였다.

유일하게 교섭단체 지도부 중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만이 4일부터 정상화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을 지키면서 국정감사 진행을 하였으나, 여당 의원인 김진태 의원과의 의견충돌만 이슈화되었다.

7. 전문성과 소수자 배려를 위해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 47인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이 가장 많이 배치된 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16명 중 8명으로 50.0%)이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에 배정된 비례의원 대다수가 노동전문가였음에도 국정감사에서 노동문제는 크게 이슈화되지 못하였고, 성과급연봉제, 철도파업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찾지 못하였다.

20대 국회는 전체 의원 중 초선의원이 132인으로 전체 국감위원의 44.1%를 차지하였으나, 초선의원들 대다수가 국정감사의 본질에 대한 질의보다는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에 더욱 앞장섰다는 평가이다.

8. 국정감사모니터단은 국정감사법에 따라 30일 국정감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제20대 국회에 대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형식적 국정감사’ 라고 질타하면서 이제라도 국정감사다운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이 되어 주기를 촉구한다.

II. 제20대 국회 1차년도 국감 특징

1. 국감사상 초유 집권여당(새누리당)의 포괄적 국정감사 보이콧

제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참여를 거부하여 국정감사 진행이 일주일동안 안되거나, 야당 간사가 국정감사의 사회권을 넘겨받아 국정감사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초반 미 실시 대상기관수》

일자	9.26.(월)	9.27.(화)	9.28.(수)	9.29.(목)	9.30.(금)	계
법제사법	6	5	-	1	2	14

일자	9.26.(월)	9.27.(화)	9.28.(수)	9.29.(목)	9.30.(금)	계
정무	2	1	-	1	23	27
기획재정	-	1	1	1	1	4
미방	11	3	-	0	-	14
교문	7	0	-	0	0	7
국방	20	7	-	0	0	27
안행	1	1	-	1	2	5
계	47	18	1	4	28	98

※1.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에 9월 29일 감사원 감사와 9월 30일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정감사 개의선언을 하였으나, 29일 중지선언으로 30일은 기관중인이 없어 실시되지 않았음
2. 교문위는 교육부 국정감사를 9월 28일로 연기하였음

- 정말 실망스럽다. 정당정치에 간간을 두는 특성상 여,여가 부딪히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은 정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의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의무를 잊어버린 것 같다. 하루빨리 국감을 정상화해 감사가 줄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하늘은 손바닥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현재 여당이 감추고 싶어 하는 논란들은 이런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여당으로서 그간 국정에 책임을 지거나 해명을 하길 바란다. 또, 여당의원도 여당의 원이지만 야당의원 중에서도 몇몇 분은 오시지 않았는데 국감이 파행될 것을 예상했다 하더라도 참석은 해야 야당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기획재정위원회의 9월 30일 관세청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 정쟁을 이유로 우리 헌법에도 규정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권한을 저버린 여당 의원들의 행동은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서 정부와 예하 행정기관에 대한 적절한 감사를 통해 건전한 국가운영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민생의 안정을 이끄는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하루라도 속히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복귀하여 자신들의 본분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외교통일위원회의 9월 26일 외교부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개별 국정감사와 관련된 현안이 아니라 특정 당 전체의 당론에 따라서 국정감사에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였다. 국정감사가 국회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려는 정치행동의 희생양으로 삼아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9월 30일 기상청 등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2. 야당이 위원장인 다수 상임위원회의 반쪽 국정감사

거대 야3당이 국정감사 진행을 강행하여 무려 13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하지 않거나 간사만 참여한 가운데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집권여당이 없어 방패 없는 국정감사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야 3당은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국정감사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슈를 개발하지 못하고 특정 이슈에 매몰되어 국정감사 수행에 대한 의지빈약을 느끼게 하였다.

여당이 없기 때문에 질의시간 배분 등에 있어서 자유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 대한 정책난맥상이나 예산낭비사례를 지적하지 못하였다는 평가이다.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반쪽국감 대상기관수》

구분	9.26.(월)	9.27.(화)	9.28.(수)	9.29.(목)	9.30.(금)	계
미방	0	0	-	5	-	5
교문	-	14	7	8	12	41

구분	9.26.(월)	9.27.(화)	9.28.(수)	9.29.(목)	9.30.(금)	계
외교통일	4	4	-	-	-	8
국방	0	0	-	3	1	4
농림	1	1	-	5	1	8
산업	1	1	-	15	-	17
보건복지	1	1	-	4	4	10
환경노동	1	1	-	13	14	29
국토교통	3	3	-	7	2	15
계	11	25	7	60	34	137

3. 691개 피감기관 선정으로 인한 ‘수박겉핥기’ 국정감사가 현실로

이번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은 지난해보다 21개 기관이 줄어든 총 691개 기관이다. 이 가운데 위원회 선정대상기관은 651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은 전년보다 31개 기관이 감소한 40개 기관이다.

국감 파행으로 인해 2주차에 있었던 안전행정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등 국정감사 일정이 취소되기도 하였다.

과다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인해 일반 증인은 물론 피감기관에 대해 질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으로 수박겉핥기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10월 5일 미방위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29개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는데,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 56분에 끝나 여러 피감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국정감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 첨가한 강효성 의원을 제외한 23인이 출석하였고, 위원장을 제외한 22명이 질의하였으므로 점심식사 시간과 중간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한 의원당 평균 15분 정도 질의를 하였다. 피감기관이 너무 많다면 4개 기관은 오전 질의가 끝나고 돌아가라고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 모니터위원의 모니터링 내용

- 1) **주요질의 대상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이었음.
- 2) **주요질의 내용**은 최근 이슈가 되는 지진과 관련하여 지질연구원에 질의가 집중됨. 원자력연에 대해서는 대전지역 핵폐기물 관련 질의, 항우연엔 발사체 관련 질의, 세계김치연구소엔 연구소의 필요성 여부,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대한 집중 질의(의원 70퍼센트 이상이 이상천 이사장에게 질의- 출연연 관리기관이기 때문)

10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는 오후에 시작하였으나, 국정감사의 내용이 군사법원에 대한 내용이 아닌 국방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여 법제사

법위원장이 나서서 군사법원 관련사항에 집중하여 질의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기도 하였다.

■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였으나, 최근 화두에 있는 성주 사드배치와 관련된 질의가 많이 나왔다. 국방부 장관이 있는 자리이기에, 대정부 차원에서 특히 야당의원들의 질의가 많았다. 지나치게 질의가 편중되자 위원장의 제지 하에 화제가 바뀌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방위원회와 목적을 달리하고, 이번 국감은 군사법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의가 더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국감이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원들 간의 마찰로 인해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된 점은 좋지 않았다. 본인이 준비해온 질의만을 하면 되는데 굳이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평가하는 모습은 더욱 그랬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등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4. 정무위는 화상국감, 외교통일위는 국감파행 중에도 해외국감 떠나

10월 7일 정무위원회는 국회 영상회의실(220호실)에서 세종시에 있는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영상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국회까지 오는 불편을 덜어 주면서,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영상 국정감사는 14년 전인 2003년 10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한국전산원에 대한 국정감사시 독일에서 국제회의의 활동 중이었던 이상희 의원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감기관의 장과 일문일답을 한 사례가 있었고, 2005년(산업통상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시 해외근무중인 본부장에게 질의)과 2006년(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지방기상청 국정감사)에도 시행한 적이 있다.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10월 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대전 지역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영상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외교통일위원회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의 국감보이콧으로 국내반 국정감사가 반쪽 국감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국정감사를 떠나 반쪽 국정감사를 진행하다가 정상화이후에는 해외국감일정을 조정하여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예산 낭비와 시간 낭비가 심각함으로 해외국감을 대폭 감소하여 문제있는 재외공관만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영상시스템을 통한 화상국정감사를 20대 국회에서는 꼭 시행해야 할 것이다.

법률소비자연맹 조사결과

(1) 제19대 국회 감사시간보다 비행기 탄 시간이 최소 3배 이상 많아 :

비행시간 540시간, 감사시간은 겨우 181.5시간

인천국제공항에서 시작하여 감사를 할 재외공관까지 감사일정별로 최소의 비행시간을 조사해본 결과, 제19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최소 540시간을 비행하면

서, 정작 국정감사를 한 시간은 181시간 34분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비행기를 탄 시간이 감사시간보다 3배나 많았다. **(공항까지의 이동시간과 공항대기시간 제외)**

연도별로 2012년도에는 비행시간이 130시간 20분 소요되었으나 국정감사를 한 시간은 42시간 44분에 불과하였고, 2013년도에는 159시간 16분 비행기에 탑승했으나 57시간 01분 국정감사를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50시간 02분을 비행기에 탑승하였으나 국정감사 시간은 47시간 04분이었다. 2015년도에는 100시간 24분 비행하면서 34시간 45분 국정감사를 하였다.

(2) 재외공관 국감여비가 외교통일위 국정감사 경비의 98.98%차지

시정처리요구 1건당 비용 국내반의 135배나 많아

재외공관 국감여비가 외교통일위 국정감사 경비의 98.98% 차지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경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외교통일위의 19대 국회 1차년도부터 3년간 국정감사 경비지출은 12억9천8백만2십3만5천원이었는데, 이중 재외공관 국정감사 여비가 12억 8천5백만원으로 전체 국정감사 경비의 98.98%를 차지하였다.

감사시간당 여비 111.5배 차이 :

국내반은 7만 6천원, 재외공관반은 8백5십2만원

2013년도 국내반 국정감사시간은 8개 기관에 대해 33시간 55분 국정감사를 하였는데, 재외공관 국정감사 시간은 30개공관에 대해 57시간 01분이었다. 감사시간당 여비를 계산해보면 국내반의 감사시간 1시간당 여비는 76,470원꼴이었는데, 재외공관국정감사 여비는 8,526,316원이었다. 재외공관국정감사 여비가 국내반보다 무려 111.5배나 되었다.

5. 정상화이후에도 고질적인 일반증인 채택 파행 발생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성엽)의 10월 6일과 7일 지방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다가 낮에는 파행하고, 저녁에 국정감사를 시작하여 자정을 넘겨 가며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20대 국회 교문위의 국정감사 시작 시각과 끝난 시각 현황▶

구분	09. 26.	09. 27.	09.28.	09. 29.	09. 30.	10. 04.	10. 06.	10. 07.
피감기관	교육부 및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기관	교육부 등 7개 기관	문화체육관광 등 8개 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12개 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9개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8개 기관	경기도교육청 외
장소	정부세종청사	국회	국회	국회	국회	국회	국회	국회
개회	10:16	10:03	10:09	10:10	10:08	10:08	10:06	10:26
산회	14:34	9.28. 1:20	9.29. 1:22	22:55	20:07	23:52	10.7. 2:23	10.08 0:20

6. 국감정상화 이후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부실, 지연 여전

- 실질적 국감방해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서 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

한 조치요구(주무장관에게 해명요구,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거부, 부실, 지연이 여전한 것은 문제이다.

10월 5일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국무총리 공관 물품 구입 내역이다. 담당 과장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긴 힘들지만, 아주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9월 18일 15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한 건의 자료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전화를 받지 않고 시간을 지연하거나, 간혹 전화를 받으면 제출하지 않는 사유가 ‘장례식에 갔다’ ‘부모님 생신이다’ ‘직원이 병가를 냈다’ ‘직원이 공항장에다’ 이런 핑계를 댔다.

10월 6일 안행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청이 6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사전 답변서를 통해 “(민중총궐기 당시) 30분 단위의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으나 김 의원은 경찰이 지난 5월 9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공개하며 상황속보가 작성됐음을 지적했다.

10월 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삼성 안전점검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3년 (경기 화성)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이후 안전 점검한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삼성디스플레이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내왔다”며 “고용노동부가 삼성그룹 문서를 전달하는 부서냐”고 따져 물었다.

정상화 이전에도 국회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 기획재정부위원회)은 9월 29일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한전 전기요금의 원가수준 검증 및 원가절감 방안 검토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27일 교문위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두 재단 설립 관련 자료 제출을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문체부는 ‘해당사항이 없음, 보유 서류 없음, 아는 내용 없음’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7. 자정이후 국감은 ‘주파야감(晝跋夜監)’ 의 교문위가 유일,

올해 국감은 대부분 저녁 7~8시 전후종료

10월 4일 국정감사 정상화 이후에도 낮에 파행을 하다가 밤에 국정감사를 진행하여 자정을 넘긴 소위 주파야감의 상임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성엽)가 유일했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더라도 정상화이전 9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23시 50분에 종료된 것과 9월 26일 산업통상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23시 16분에 종료된 것이 전부이며, 그 외에는 23시 이후에 국정감사 진행된 경우는 없었다.

8. 세종시에서의 국정감사는 미 실시 내지 반쪽 국정감사

세종특별자치시에 열린 국정감사는 미 실시 또는 반쪽 국정감사로 진행되었다. 이들 동안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첫째날 20시 31분에 종료되었고, 이튿날에는 국정감사 시간을 20시 29분에 종료되었다. 그마저도 새누리당 참여가 없는 반쪽짜리 국정감사였다.

- | |
|---|
| 1)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감(9.26.) 미 실시 |
| 2) 교육부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9.26) 연기 |
| 3)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9.26) 반쪽 국감 |
| 4) 해양수산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9.27) 반쪽 국감 |
| 4) 고용노동부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9.26) 반쪽국감 |
| 6) 환경부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9.27) 반쪽 국감 |
| 7) 보건복지부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9.26-27) 반쪽 국감 |
| 8)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9.26) 반쪽 국감 |
| 9)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9.27) 미 실시 |
| 10) 국제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9. 29.) 미 실시 |

9.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장을 제외한 299명의 의원 모두가 감사위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8선으로 최다선이었으며 국회의장을 제외한 299명이 감사위원이었다. 매년 유고(의원직 상실)나 수감 등과 함께, 감사위원이 피감기관의 장이 된 경우가 있었고, 19대 국회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2014년 10월 14일 교문위 국정감사장에서는 미방위 소속 서상기 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장의 자격으로 국정감사 종료시까지 피감기관에서 국정감사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번 경우에는 피감기관의 장이 감사위원인 경우는 없었다.

《20대 국회 1차년도 감사위원 당선횟수별 분석》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6선이상	계
의원수	132	70	47	34	10	6	299

10. 초선 132명 중 국정감사 스타 발굴은 어려워

감사위원의 44.1%인 132명의 초선의원이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으나, 파워포인트 사용 등 국정감사 기교는 진보하였으나, 피감기관의 정책 잘못이나 입법불비, 예산낭비 요인을 발굴하여 지적하는 것보다 피감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중심으로 통

계를 내서 발표하는 것에 머물러 진정성이 떨어지는 국감으로 시민(모니터)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였다.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감사위원 중 초선의원 현황》

위원회	위원장 (감사반장)	간사	전체 감사위원수	초선의원수	비율
법 제 사 법	권성동 (새누리당)	김진태(새누리당) 박병계(더민주) 이용주(국민의당)	17	6	35.3%
정 무	이진복 (새누리당)	유의동(새누리당) 이학영(더민주) 김관영(국민의당)	24	11	45.8%
기 획 재 정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계(새누리당) 박광온(더민주) 김성식(국민의당)	26	7	26.9%
미래창조과학 방 송 통 신	신상진 (새누리당)	박대출(새누리당) 박홍근(더민주) 김경진(국민의당)	24	15	62.5%
교육문화체육 관	유성엽 (국민의당)	염동열(새누리당) 도종환(더민주) 송기석(국민의당)	29	13	44.8%
외 교 통 일	심재권 (더민주)	윤영석(새누리당) 김경협(더민주) 이태규(국민의당)	22	1	4.5%
국 방	김영우 (새누리당)	경대수(새누리당) 이철희(더민주) 김중로(국민의당)	17	7	41.2%
안 전 행 정	유재중 (새누리당)	윤재옥(새누리당) 박남춘(더민주) 권은희(국민의당)	22	10	45.5%
농림축산식품 해 양 수 산	김영춘 (더민주)	김태홍(새누리당) 이계호(더민주) 황주홍(국민의당)	19	9	47.4%
산업통상자원	장병완 (국민의당)	이재익(새누리당) 홍익표(더민주) 손금주(국민의당)	30	18	60.0%
보 건 복 지	양승조 (더민주)	김상훈(새누리당) 인재근(더민주) 김광수(국민의당)	22	12	54.5%
환 경 노 동	홍영표 (더민주)	하태경(새누리당) 한정애(더민주) 김삼화(국민의당)	16	12	75.0%
국 토 교 통	조정식 (더불어)	이우현(새누리당) 민홍철(더민주) 윤영일(국민의당)	31	11	35.5%
13개	새 6, 더 5 국 2	전체간사 39인 초선간사 10인	299	132	44.1%

■ 초선의원들은 확실히 본인들 할 말만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예를들어 이제정 의원같은 경우는 경찰청장에게 답변할 시간을 주지도 않고 웃으면서 “인정하시죠? 답변 못하시네요?” 하는 등 답변을 물아가는 모습을 보여서 눈살이 찌푸려졌다. 표창원 의원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경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약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서 의아했

11. 비례대표 47인은 제19대 국회와 같이 전문성에 의구심

국정감사는 비례대표 의원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호기이다. 그러나 비례대표의 직업이나 전문성과 상관없는 위원회에 배치되거나, 배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정감사에 대한 핵심적 질의를 하지 못하였다.

《비례대표 의원의 상임위원회 편성 및 상임위원회 배치근거 부족현황》

위원회	상임위 의원수	비례대표 의원수	비례대표 비율(%)	상임위 배치근거 부족의원수	배치근거 부족의원 비율
법 제 사 법	17	0	0.0%	0	0%
정 무	24	5	20.8%	1	20.0%
기 획 재 정	26	2	7.7%	1	50.0%
미 래 창 조 과 학 신	24	8	33.3%	0	0.0%
교 문 화 체 육 관 광	29	4	13.8%	1	25.0%
외 교 통 일	22	1	4.5%	1	100.0%
국 방	17	4	23.5%	1	25.0%
안 전 행 정	22	3	13.6%	1	33.3%
농 축 산 식 품 해 양 수 산	19	1	5.3%	0	0.0%
산 업 통 상 자 원	30	3	10.0%	0	0.0%
보 건 복 지	22	7	31.8%	2	28.6%
환 경 노 동	16	8	50.0%	3	37.5%
국 토 교 통	31	1	3.2%	0	0.0%
계	299	47	15.7%	11	23.4%

* 상임위 배치근거 부족의 평가는 학력,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상임위 전문성과 일치되는 것을 단순 평가한 것임.

■ 몇몇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과 관련성이 깊은 내용만을 질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상청이 유일한 지진 관련 기관은 아니다. 물론 관측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관련성을 보이지만, 타 지역 댐, 보가 지진단층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기상청에서 담당할 수는 없다. 이러한 관련성이 떨어지는 질의를 하고, 피감기관자에게 호통만 치다보니, 더 중요한 점들을 짧은 시간 내에 놓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번 기상청의 경우, 빛나간 예측 시스템에 대한 질의가 더 필요했다. 지진과 같이 단기적이고 예측이 힘든 경우도 있지만, 호우나 날씨 정보 같은 일상적 예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하게 기상청을 질타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등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12. 국회부의장 및 다선의원 국감 : 대부분 외교통일위에 포진되어 해외국감

국회부의장 2인과 6선 이상 다선의원 6인 중 5인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국내반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해외 국감을 갔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은 국내반 국정감사에서 참석하여 질의를 하

였고,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의원은 국내반 2일차에 청가를 하였다.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다선의원인 이해찬 의원, 천정배 의원은 각기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면서,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국정감사 상황을 잘 올려놓고 있다. 다만 이해찬 의원의 경우에는 이명박 시절 공항공사 민영화 저지 등 경험 위주로 질의를 하고, 질의를 한 후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있었다.

(1) 국회부의장

정당	의원명	지역구	위원회	국감활동
새누리당	심재철	경기 안양시 동안구(5선)	기획재정	국감 파행으로 10월 4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초선처럼 정책질을 잘하고 있음
국민의당	박주선	광주 동구남구(4선)	외교통일	9월 26일 국정감사에는 참여하였으나 27일 국정감사에는 청가를 하여 참여하지 않고 현재 미주반으로 해외국감 중임

(2) 6선이상 다선의원

선수	의원명 (정당)	지역구	위원회	국감활동
8선	서청원(새)	경기 화성시갑	외교통일	국감 파행으로 9월 26일과 27일 국감에 참여하지 않았고, 아주반에 편성되어 해외 국감중임
7선	이해찬(더)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	9월 30일 더불어 민주당에 복당하였으며, 국토위원회 일정대로 결석없이 출석하여 질의를 하고 있으나 자리뜨기는 심함.
6선	김무성(새)	부산 중구영도구	외교통일	국감 파행으로 9월 26일과 27일 국감에 참여하지 않았고, 구주반에 편성되어 해외 국감중임
	문희상(더)	경기 의정부시갑	외교통일	9월 26일과 27일 국감에 참여하였고, 아주반에 편성되어 해외 국감중임
	이석현(더)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외교통일	9월 26일과 27일 국감에 참여하였고, 아중동반에 편성되어 해외 국감중임
	천정배(국)	광주 서구을	보건복지	국토교통위원회 첫날부터 7일동안 결석없이 출석하여 질의를 하고 있음.

* 6선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정감사 위원이 아님

13. 2016년도에 그래도 약간 개선되었다고 평가된 점

(1) 감사위원의 감사장 이석이 줄었음

질의를 한 후 자리를 뜨는 이석이 많았으나, 이번 국정감사에선 정상화이후에 국정감사장에서 자리를 지키는 의원이 많았고, 자리를 뜨기를 하는 경우에도 전화 통화나 생리문제 등을 이유로 잠깐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있었으나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주요 당직자들을 제외하고는 많이 사라졌다.

■ 몇몇 의원들이 자신의 질의 시간에만 참석하고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른 의원들이 하는 질의도 피감기관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고, 각자가 질의 하는 내용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닌데도 자리를 비우는 것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무위원회의 경제사회인문연구회 및 출연 23개 기관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2) 일목요연한 정리 및 질의방법

영상이나 파워포인트 등 기계적 장치로 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정감사 질의 기법이 좋아져, 대부분 의원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3) 포퓰리즘적 국감소품은 눈에 띄게 줄었음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품이 많았으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치약이나 샴푸 등 소품이 나오기는 하였지만 많이 줄어들었다.

《제20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의 의미》

1.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4·13 제20대 총선에 의해 구성된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임

2. 여소야대인 원내교섭 3당체제의 국정감사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원내 3교섭단체로 구성되어 실시되는 국정감사

3. 박근혜 정부 4년을 종합평가하는 국정감사

박근혜 정부 출범 4년차인 올해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정감사임(내년은 대선전초전으로 종합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4. 1988년 국정감사 부활이후 29번째 국정감사

군사독재의 종식과 민주화의 상징으로 부활된 지 13대 국회 첫 국정감사(1988년 시행)후 29번째 국정감사임

5. 299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국정감사

국회의장을 제외한 299명의 국회의원이 감사위원으로 편성되었고, 예년과 달리 국무위원이 한명도 없기 때문에 299명이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몰두할 수 있었던 국정감사

6. 초선 의원 132명의 국정역량을 과시하는 경연장 - 스타탄생도 가능한 국정감사

전체 감사위원의 44.1%를 차지하는 132명이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입성으로 하고자 한 정책비전을 아낌없이 제시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국정감사

7. 잠재적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 및 국정수행능력 평가도 곁할 수 있는 국정감사

여야의 잠재적 대선후보자들이 감사위원 내지 피감기관의 장으로 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국정수행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국정감사이기도 함.

Ⅲ. 제20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 주요 이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관련된 대형 거대 쟁점은 태풍피해 대책, 백남기 농민사망사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이고, 위원회별로는 검찰개혁, 법조비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문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한미약품 사태, 조세환급문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실효성과 부적절한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정부의 대북정책 실효성, 가계부채 급증문제, K스포츠 재단의 태권도 시범단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행사에 참석한 경위,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조세정책, 경기부양대책, 금융시장 안정, 통신비 절감대책, 지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문제, 최순실 씨의 딸 대입합격과정 특혜여부, 누리예산편성문제, 한국사 국정교과서 원본 공개여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 수출전략,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 위한 재원 마련, 서울시 청년수당제도, 사드배치장소, 북한핵 대응, 사행사업문제, 김재수 장관 특혜대출, 정부의 원자력 정책, 쌀값안정화대책, 한진해운 사태와 전기료 누진제 개선 방안, 잇따른 노조 파업문제, 청년희망재단에 대한 정부의 특혜 의혹, 화학 제품의 안전성 관리 물류대책, SOC확충, 주택시장 안정화 등의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음

■ 상임위원장을 제외하고 16명의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심이 되는 이슈들만 얘기해서 상당 부분 질문이 반복 되었고 피감기관은 그 질문에 대해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아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혼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국회의원들이 서로 뜨거운 감자만을 말해서 마스크를 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서로 부분을 나눠서 질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피감기관은 너무 주눅들어서 얘기하지 말고 몇몇하게 공직생활을 해서 당당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보여주기 식이 아닌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 많은데 지나치게 특정 이슈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의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로 인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문제제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1.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관련

미르재단과 K 스포츠재단과 관련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를 비롯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정부위원회, 기획재정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었고,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간접적인 질의가 이어져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6일과 7일 교문위의 국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최순실씨의 딸 대입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해 파행을 하였다.

10월 5일 기획재정부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지정 기부금단체로 승인한 기재부에 대한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 정부의 금융당국 부실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행정위원회와 검찰 법원 등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로 다루어졌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백남기 농민 사인과 관련하여 다루어졌다.

9월 29일 애초에 예정되었던 안행위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으나,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문제점들이 지적하였다. 10월 6일 다시 이뤄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시위시에 물대포 문제 등이 다루어졌으며, 10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는 부검영장과 관련되어 영장문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농민 사망의 원인이 병사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서울대학교 의대생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등 이슈화되자 서울대병원 의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3. 태풍 ‘차바’ 피해 대책

남부지방이 태풍 ‘차바’ 로 크게 피해를 입자, 관련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의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와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등에서 집중질의되었고, 대책 등이 논란이 되었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촉구되었고, 정당은 태풍피해보전대책을 강구하였다.

4. 연구기관과 공기업 방만경영 및 모럴해저드 문제

지난해에 이어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많은 상임위원회 소관 연구기관이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부채 문제 등이 감사되었다.

10월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의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국정감사에서는 전관 영입 이른바 ‘도피아’ 가 엔지니어링 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공 출신을 영입한 업체가 도공이 발주하는 실시설계의 93%를 수주한다며 엔지니어링 업계에 만연한 도공의 전관예우 특혜를 지적했다.

5. 사드 배치 지역 논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 2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드배치를 둘러

싼 여야 공방이 있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계속되는 북한의 핵 도발에 우리나라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드 배치를 통해 우리 군이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사드배치 부지가 주변 기반시설과 작전 운영 등 군사적 판단에 따라 변경된 만큼, 더 이상 지체 없이 사드 배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가 1,000억 규모의 성주 골프장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피하기 위해, 군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와 맞바꾸는 ‘대토보상’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사드배치는 중대한 군사적 사안인 만큼 주민의 동의를 구한 뒤,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의 비준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치약 등 가습기살균제 원료 논란

보건복지위의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쓰이는 CMIT와 MIT가 함유된 제품들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며 식약처의 허술한 관리망을 질타하고 규제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7. 경주지진과 관련 원자력 안전 문제

경주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발전 안전관리를 둘러싼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노후화된 원전을 무리하게 가동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8. 한진해운사태

정무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한진그룹회장이 오후에 증인으로 나와서 그룹차원의 한진해운 사태를 조명하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0월 7일 부산항만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로 인해 부산항의 환적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협력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노위는 10월 7일 현장시찰로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사측과 노조, 협력사 임직원들을 차례로 만나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입장을 듣고 대안을 논의했다.

IV. 국감수행 교섭단체 및 대표에 대한 평가

1. 국정감사를 보이콧해 국민비난 속 국정감사의 예봉을 꺾은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9월 24일 심야에 있었던 김재수 농림부장관 해임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모든 국회일정을 중단함으로써, 9월 26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열릴지 여부조차 알 수 없도록 하여 집권여당으로서의 무책임한 행동을 하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보이콧으로 돌려서 거대 야당의 국정감사 예봉을 누그러뜨리고, 김재수 해임건의안도 유아무야가 되게 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민생불안과 안보불안, 경제불안 등의 위기에 직면한 국민들은 집권당의 행태에 대해 공분하였다.

2. ‘창’의 역할에 미흡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단독국감 진행 때부터 국감이 정상화된 현재까지 백남기(白南基, 1947년 10월 8일 ~ 2016년 9월 25일)농민 사건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의 사건에만 집중하였고, 현 정부의 정책 난맥상이나 부정부패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 초반 중앙부처에 대한 단독 국감을 전개할 수 있어, 여당의 방해받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난맥상, 예산낭비 사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었음에도 특정 이슈에 매몰되어 버린 것은 야당의 국정감사 수행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였다.

3. ‘균형추’의 역할에 미흡하다는 국민의당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단독 국정감사를 강행하여 새누리당이 1주일 후에 복귀하도록 하는 데는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립에 대해 균형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국감 파행 이후 초기에는 새누리당의 복귀를 기다렸으나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사실상 반쪽 국감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4. 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감 수행 평가

“크게 부실하나, 박지원 원내대표가 모범을 보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국정감사 시작 전부

터 국정감사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계속하느라 국정감사는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9월 28일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국정감사 복귀를 하라고 하였고, ‘쌀알에 대패질 하듯’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10월 4일 국정감사 복귀 후에 교문위 국정감사장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감 직전에 사·보임하여 첫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장에 참석하여 잠깐 인사를 하였고 질의를 하지 않았으며, 둘째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는 불참하였으며, 아주반에 편성되어 있으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소식도 없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개의만 한 감사원 국정감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10월 4일 국정감사 정상화 이후에는 국정감사장에 참여하여 정책질의를 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진태 의원과의 대립각이 이슈화되어 보도되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10월 4일 국정감사전인 병무청 국정감사와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장에는 새누리당 불참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10월 5일 정상화 이후 첫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오전에 참여하여 정책질의를 잠깐 하고 떠났으며, 10월 7일 합참 국정감사는 비공개부분이 있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9월 29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참여하였고, 10월 5일 정상화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참여하여 질의를 하였다.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당무 때문에 국정감사를 집중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국정감사의 비중이나 기능을 생각할 때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감활동을 위해서라도 나머지 국정감사에는 100% 출석 및 100% 정책질의를 하는 풍토를 기대한다.

V. 2016년도 국정감사장 풍경

1. 모니터위원이 지적한 쫓돌건 국감장

(1) 9월 26일(월) 국감 없는 기재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쫓돌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이 모든 의사일정

을 거부키로 함에 따라 거의 모든 소속 의원들이 국감에 불참하면서 '반쪽 국감'이 시작되었다. 법사위, 정무위, 미방위, 교문위, 외통위, 국방위, 안행위, 농해수위, 산자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열 예정이었으나 아예 개의되지 못하거나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 9월 27일(화) 위원장의 국감 거부 사태에 피감기관 장까지 '나도 안가'

제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9월 26일 미래부 국정감사에 이어 미 실시 되었다. 피감기관의 장인 최성준 방통위원장, 방통위 상임위원 등도 불출석하였다가 국회법 위반 지적을 받아 오후에 출석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3) 9월 29일(목) 4일 동안 잠자고 있는 법사, 정무, 기재, 안전행정위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서울 감사원 강당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개회를 선언하였으나, 국감진행은 없었다. 이외에도 기재위의 국제청 국정감사, 안전행정부의 경찰청 국정감사,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실시되지 못했다.

(4) 9월 30일(금) 증인 없어 국감 못 한 법사위의 특별감찰관실 국감장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오후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기관증인이 없어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현장시찰 개념으로 진행하였다.

(5) 10월 4일(화) 책임공방으로 국감시간허비 농림위의 농진청 국정감사장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정현 대표를 서로 깎아 내리며 양보 없는 설전을 펼쳤다.

(6) 10월 5일(수) 김제동 동영상 국방위 국방부 국정감사장

북핵 문제, 사드배치, 전작권 환수논란 등 엄중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이 김제동의 강연 동영상을 상영하면서 그 말(비록 그게 사실이어서 군인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하더라도)을 문제삼는 데 귀한 질의시간을 허비하였다.

(7) 10월 6일(목)과 10월 7일(금) 국회 교문위의 지방시도교육청 국감장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3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을 앞두고, 이를 연속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을 전개해 파행했다.

2. 모니터위원들에게 실망을 주었던 점

(1) 기껏 찾아갔는 데 국정감사 안해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비를 들여서 국정감사장에 찾아가서 대기를 하였으나 무려 98개 기관에 대한 6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실시되지 않아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고 앉아 있다가 허탕을 쳐야 했다.

(2) 주무관이 국정감사에서 답변

9월 27일 문화체육부에 대한 교문위 국정감사에서는 많은 시간 피감기관의 답변자가 해당 업무의 주무관이었다. 증인신청을 하여 나온 것이라지만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되어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많았는데, 결국 주무관과 사무관이 나와서 길게 답변을 하였다.

(3) 태풍 속 국정감사장 파행

10월 6일 교문위 국정감사장에서는 태풍피해지역 시교육청 교육감이 국정감사를 받으러 국회까지 왔으나 여야당의 증인채택 공방으로 국정감사 질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4) 감사시간의 단축(?)

제20대 국회에서 지난해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691개 피감기관이었고 국감 보이콧 등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후에도 지난해와 같이 일찍 종료되었으며, 파행을 거듭하여 자정 너머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 교문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밤 10시를 넘기는 경우조차 드물었다.

(5) 국정감사장에서의 즐기

국회의원도 즐고, 국정감사장에서 배석한 이들의 즐음 및 탄 짓이 늘었다. 피감기관으로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그 나물예 그 밤과 같은 질문이 계속되어 국정감사에서 조는 경우가 있었다.

(6) 국방위 국감에서의 “김제동” 논란

새누리당 초선 백승주 의원은 10월 5일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방송인 김제동씨가 군시절 영창에 다녀온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국방부가 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제동의 국방위 증인신청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7) 반쪽 국감에서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빈자리”

새누리당이 1주차 국정감사에 불참함으로써, 연일 언론에서는 교문위, 산업통상자원위 등 반쪽 국정감사에서 한쪽이 텅빈 국정감사장을 클로즈업하여 보도하였다.

(8) 감사위원의 전문성이 의심되는 질의와 피감기관의 동문서답

감사위원의 질의가 피감기관을 압도할 정도의 전문성과 증거자료를 갖지 못하여 피감기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회피하거나 동문서답을 하도록 한 경우도 많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이 교문위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한 내용이 논란이 되었다.

■ MS오피스 프로그램과 한글워드 구매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한 질책이었는데, 1, 2차 입찰이 유찰되어 결국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다는데, 이은재 의원은 그 업체가 1, 2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조희연 교육감측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결국 수의계약을 했고, 개별 학교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29억원을 절감하였다는 주장하였다. 질의 중에 이은재 의원이 MS오피스나 한글워드 프로그램 구매 방식을 잘 몰랐던 것으로 추측되며, 조희연 교육감 역시 두 프로그램을 회사와 직접 계약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조희연 교육감이 MS워드를 MS에서 사지 어디서 사냐고 반문한 것도 넌센스였다. 주요 프로그램은 중간에 판매대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문위의 서울시교육청 등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 실제 민생과 직결되는 세금을 총괄하는 국세청을 피감기관으로 할 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의원들은 관련 제반 지식을 확실히 습득하여 더욱 충실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좋겠다.(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3. 여전히 변치 않는 국감장

(1) 국감장 밖에 지자체 국감폐지 등 시위

국정감사장 밖에서 민원인들이 시위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국정감사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관행화되었다. 10월 7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제2국제공항 건립 반대 시위가 있었다.

(2) 무성의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자료제출을 위한 비용이 40억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감사위원들의 입장에서 국정감사 자료제출이 부실하거나 원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요구 했으면, 적어도 보충 질의 때까지는 취약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3) 샴푸 등 국감 소품 등장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치약에서 부터 시작하여 샴푸 군인 방한복 등 다양한 국감 소품이 국정감사장에 등장하였다.

(4) 질의시간 제한과 시간초과 소리 없는 질의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발언시간을 초과하여 질의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시간을 초과한 경우 소리가 외부로 나오지 않아 질의 내용을 들을 수 없었다.

■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국회의원의 마이크가 꺼지는데, 계속 발언을 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국정감사장에서는 들리지만 화상모니터링 상으로는 들을 수 없었던 점이 불편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 가장 고쳤으면 하는 부분은 의원들이 발언 시간을 초과하는 행태이다. 물론 7분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논의하기에 많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것은 알지만 핵심만 얘기하면 되는데 본인의 의견을 과도하게 피력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국정감사시간이 매우 길어졌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질의가 끝나면 핸드폰을 보거나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의원이 몇몇 있었다. 아주 짧은 찬나였더라도 그러한 모습이 화면에 잡혀서 보기에 좋지 않았다.(미방위의 미래부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5) 피감기관의 회피성 답변

회피성 발언으로 ‘(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다’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곤란하다,’ ‘이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좀 더 노력하겠다.’ ‘자세히 살펴 보겠다’ ‘다시 조사해보겠다’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어느 기관과 협의해 의논해보겠다’ 등 다양하였다.

■ 비단 해당 기관 장 개인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정부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외에 독자적으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할 의지는 거의 없어보였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사회보장정보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 피감기관인 국세청도 해당 국정감사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원론적인 응답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6) 대선 유력후보에 대한 출마 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임무보다는 내년 대선에 출마할지를 물어보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버렸고,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정책과 관련된 질의가 많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에 대한 안정행정위원회 국정감사(10.4)와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10.5)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청 국정감사(10.7)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수 언론에 의해 집중 보도되었다. 9월 30일에는 농림위의 전남도청 국정감사도 진행되었다.

(7) 동시수감기관이 많아 감사의원은 시간부족, 피감기관은 병풍 역할

동시수감기관이 많을 경우에 감사의원은 한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으로 주어질 시간을 다 채워 다른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동시 수감기관 중 주 피감기관에 대해 질의가 집중되어 다른 피감기관은 병풍처럼 국정감사 내내 침묵으로 일관을 해야 한다.

하루에 10개 이상의 피감기관을 감사하겠다고 계획서를 세운 상임위원회가 7개 위원회에 감사일수는 18일이나 된다.

《2016년도 10개 이상 동시수감 감사일수 현황》

위원회	하루 10개이상 기관 감사일수	위원회	하루 10개이상 기관 감사일수
법제사법	4	국방	2
정무위원회	1	산업통상자원	1
미방	3	환경노동	3
교문	4	계	18

(8)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모니터링 지속적인 방해 여전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대다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모니터링을 마련하는 등 모니터링활동을 위해 배려를 해주고 있지만, 피감기관별로 또는 국회본청 국정감사장에서는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정감사NGO모니터링에 대한 인식부족과 간섭으로 인해 사실상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영우, 경기 포천시·가평군)에서는 국회본청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모니터위원을 피감기관 뒤쪽에 배치시켜 사실상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었다.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산업통

상자원위원회(위원장 장병완) 등에서는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들어가 모니터위원들의 숫자를 사전 협의없이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좌석을 제한하여 사실상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임위 직원의 호가호위식 간섭이 많았다.

또한, 김영란법 시행이후에는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정감사에서 모니터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식사를 할 곳을 찾지 못하는 등 제20대 국회 들어 이전에 없던 모니터불편으로 인해 모니터링을 충실히 하는데 장애를 주어 개선이 요구되었다.

VI. 2016년(19-4)국정감사위원 홈페이지 활용도

**국정감사자료 홈페이지 등 온라인게시 29.1%(19대 50%)로 19대보다 크게 저조
환경노동위원회 감사위원은 68.8% 게시, 외교통일위는 17.4%에 불과**

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원 현황 중에 안내된 국회의원 홈페이지(블로그 등 포함)에 국정감사 자료(보도자료나 질의자료, 동영상 등 활동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한 자료, 단순 일정이나 보도된 언론기사는 제외)가 있는 지를 확인해 본 결과(10.4~10.6.), 국회의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299명 중 87명으로 전체 감사위원 중 29.1%만이 국정감사 활동내역을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다.(조사 중 홈페이지가 있으나 연결이 안 된 경우, 페이스북 등 가입을 해야 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했음)

위원회별로는 환경노동위원회가 16명의 감사위원중 7명이 올려 놓아 43.8%의 게시율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무위원회가 37.5%,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36.4%로 높았다. 가장 게시율이 저조한 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로 22명의 감사위원 중 3명만 국정감사활동내역을 올려 놓고 있었으며, 인터넷 분야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24명의 감사위원 중 5명만 국정감사활동내역을 게시하고 있었다.

초선의원 경우에는 대부분 국회 홈페이지 내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개인sns를 소개하고 있지 않아서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조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20대 국회 1차년도 감사위원 홈페이지 국감자료 게시현황》

위원회	감사위원수	국회를 통해 홈페이지 주소를 소개한 의원수	홈페이지 소개의원비율	홈페이지에 국정감사자료게시한 의원수	국감내용 게시의원 비율
법제사법	17	11	64.7%	5	29.4%

위원회	감사위원수	국회를 통해 홈페이지 주소를 소개한 의원수	홈페이지 소개의원비율	홈페이지에 국정감사자료게시한 의원수	국감내용 게시의원 비율
정 무	24	18	75.0%	9	37.5%
기 획 재 정	26	16	61.5%	7	26.9%
미래창조과학 방 송 통 신	24	15	62.5%	5	20.8%
교 육 문 화 체 육 관 광	29	20	69.0%	9	31.0%
외 교 통 일	22	21	95.5%	3	13.6%
국 방	17	10	58.8%	4	23.5%
안 전 행 정	22	15	68.2%	8	36.4%
농림축산식품해양 수 산	19	15	78.9%	6	31.6%
산업통상자원	30	19	63.3%	8	26.7%
보 건 복 지	22	16	72.7%	8	36.4%
환 경 노 동	16	9	56.3%	7	43.8%
국 토 교 통	31	17	54.8%	8	25.8%
계	299	202	67.6%	87	29.1%

<참고 제19대 국회 2015년도 국회의원 홈페이지 국정감사 활동 내역 게시현황>

위원회	감사위원 수	홈페이지 자료게시한 의원수	홈페이지게시율	위원회	감사위원 수	홈페이지 자료게시한 의원수	홈페이지게시율
법제사법	16	8	50.0%	안전행정	21	8	38.1%
정무	24	13	54.2%	농림축산 식품 해양수산	19	9	47.4%
기획재정	26	17	65.4%	산업통상 자원	30	18	60.0%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23	8	34.8%	보건복지	21	10	47.6%
교육문화체육 관광	30	15	50.0%	환경노동	16	11	68.8%
외교통일	23	4	17.4%	국토교통	31	19	61.3%
국방	17	8	47.1%	합계	297	148	49.8%

Ⅶ. 효율성,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감 개선 제안

(대부분 18년 동안 제안했지만 아직도 제도적으로 시정되지 않고 있음)

1. 법대로 정기국회 전 30일 국감하고 별도의 증인신문기일을 두어 일반증인과 시찰을 10일정도로 하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정기국회 전에 30일 국정감사를 하면서 10일 간은 일반증인과 현장 점검 시찰 등을 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현재와 같이 20일 동안 기관증인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면, 일반증인 채택과정에서

의 문제로 인해 파행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장시찰로 가뜩이나 부족한 국정감사 시간을 할애할 것이 아니라, 현장점검 내지 시찰을 통해 먼저 확인하고, 해당기관에 따져 묻는 식의 국정감사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의원별 시정조치사항 실명제로 중복국감을 막자.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내내, 제19대 국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중복질의가 심각하고, 피감기관은 국정감사 때만 참으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으므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국감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위원회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보고와 질의한 국회의원의 철저한 점검과정으로 근절되어야 한다.

3. 외교통일위의 국정감사를 실효성 있게 하라.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심재권)의 재외국정감사는 예산낭비가 심하므로, ① 국정감사도 회상을 통해 실시하거나 꼭 필요한 핵심 기관증인만 불러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②그 대신 자료요구 철저와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하면서 ③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장 국감을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④국정감사공개원칙에 의해 인터넷 생중계도 필요하다.

그런데 올해에도 반쪽 국감으로 진행되면서 10월 1일 미국대사관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정무위원회는 10월 7일 23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영상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세종시와 이원(二元)으로 국정감사를 하여 인력과 비용을 대폭적으로 줄였다.

4. 증인채택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2016년도 국정감사는 증인채택과 관련한 파행은 없었으나, 여야 간의 논란으로 파행의 불씨는 여전하다. 또한, 피감기관의 과다에 이어 증인에 대한 과다 출석요구로 인해 국감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감이전에 증인채택에 대해 협의의 하여, 증인채택과 관련한 위원회 회의로 국감이 파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증인신청에 대한 뚜렷한 원칙과 기준을 미리 정하여, 증인과 관련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현장시찰은 국감기간 중에 하지 말고 국정감사 전에 하라.

현장시찰 편성이 많이 줄었으나, 역대 국정감사의 폐해 중 하나가 ‘사진찍기 용’ 시찰 문제인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장성을 부각하는 점에서 좋지만, 사전에 시찰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국정감사에 임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국정감사 기간 중에 현장시찰을 하여 태부족한 국정감사 시간을 더욱 줄이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현장시찰은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장을 직접 탐방하여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반드시 국정감사 중에 해야 할지는 의문이며, 국정감사 전에 위원회가 필요한 곳을 현장 시찰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합당하다고 본다.

◀ 역대국회 국정감사 중 현장시찰 현황통계 ▶

국정감사NGO모니터단(법률소비자연맹)

국회	감사년도	시찰 상임위원회수	시찰일수	비고
17대 국회	2004	11	27	
	2005	6	16	
	2006	12	36	
	2007	8	18	
18대 국회	2008	10	30	
	2009	9	22	
	2010	9	24	
	2011	11	27	
19대 국회	2012	7	19	
	2013	12	31	
	2014	6	12	
	2015	7	21	
20대 국회	2016	12	27	검입포함

※원자료 출처 : 국회사무처 의사국, 각 해당년도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 2016년, 2015년, 2014년도 통계와 2012년도 통계의 경우에는 국정감사수첩의 통계로 국정감사를 하면서 시찰을 하는 경우는 제외된 것임.

참 고

2016년도 국정감사 일정별 감사내역 편린

(국회방송 등 언론보도, 모니터내용 중심)

1. 9월 26일(월) 국정감사 첫 날, 새누리당 불참 속 ‘반쪽 국감’

국정감사 첫 날 예정됐던 12개 상임위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야당 의원이 위원장인 외통위와 복지위, 교문위 등은 여당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외교부 등에 대한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는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일본 측이 출연한 10억 엔이 배상금의 성격을 지니는지가 쟁점이 됐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이번 위안부 합의는 굴욕적이라며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통감해 공식적으로 사죄했다는 점 그리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한 것의 외교적 함의가 중요하다고며 즉답을 피했다.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진행된 복지위의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지적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개편에 대해서도 폭넓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야당 단독으로 열린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쟁점이 됐고, 산자위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한진 해운 사태와 전기료 누진제 개선방안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한편 국민의당 소속의 유성엽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문위는 교육부 국감을 이틀 뒤인 28일로 연기되었다.

2. 9월 27일(화) 국정감사 이틀째, ‘반쪽 국감’ 계속

13개 상임위중 야당이 위원장인 7개 상임위만 반쪽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문위 국감에선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문위와 산자위, 외통위 등 상임위는 야당 단독으로 국감이 진행됐다. 특히, 교문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문체부가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하루 만에 내린 배경과 거액의 자금을 출연한 전경련이 두 재단에 대한 어떤 홍보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전기료 누진제 개편 촉구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승인 철회를 포함한 정부의 원자력 정책의 전면 재검토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주형환 산업통상부장관은 전기 요금체계 근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겨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외통위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북한의 도발과 우리 정부의 제재가 반복되는 남북관계를 비판하며 정부의 대북정책 실효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한편, 여당이 위원장인 법사위와 정무위, 기재위 등에 소속된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개회를 위한 위원장의 사회권 이양을 요구했고, 정무위는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사회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산업은행 국감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

새누리당 소속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을 책임을 지고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만류로 끝내 국정감사장에 참석하지 못했고,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어제 국방위의 국정감사도 결국 무산됐다.

3. 9월 28일(수) 국정감사 사흘째, ‘반쪽 국감’ 계속

새누리당은 오후 국회에서 주요 당직자와 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경제가 파탄나고 북한이 연일 핵무장을 운운하는 상황에서 의회권력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집권정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참담하고 분통이 터진다면,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거부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교문위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원들이 요구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원본을 교육부가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이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이미 심의가 끝난 한국사 국정교과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국가기밀이 아니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다고 추궁했고, 교육부는 원고본의 대외 공개를 염두해 두질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당 소속 위원장을 둔 국회 기재위는 국정감사 정상화를 위해 여야 간사와 비공개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돼 예정된 국감이 진행되지 못했다.

4. 9월 29일(목) 국정감사 나흘째, 환노위·교문위, ‘반쪽 국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은 사실상 야당 단독 국감을 진행했다. 환노위에서는 잇따른 노조 파업과 청년희망재단에 대한 정부의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새누리당 의원으로는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최근 노동조합의 파업 등으로 인해 협력 업체와 국민 경제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 시설에 대한 노조의 점거를 제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청년희망재단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기관 직원을 파견하는 등 재단의 설립, 운영 전반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성과연봉제 선도 기관을 선정한 뒤 공공기관들이 좋은 경영 평가를 받기 위해 노조와의 합의 과정 없이 무리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교문위의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문화재단이 설립한지 1년도 되지 않고 아무 실적도 없는 미르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 이상하다며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은 것인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야당 의원들은 우리의 대표 전통문화 공간인 한국의 집에 프랑스 요리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국회법에 따라 야당 간사가 사회권을 갖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새누리당 소속의 신상진 위원장과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는 더 이상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다릴 수 없어 국회법에 근거해 국정감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감 개시를 선언했다.

원자력안전위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근 지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 의원들은 활동성 단층 위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된 점을 지적하며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원자력발전소는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하는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에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제와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원자력안전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한편,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와 안전행정위 등의 상임위는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참석을 거부해 국정감사가 열리지 못했다. 정무위는 당초 오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여당 소속의 위원장과 의원들이 불참해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안전행정위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와 관련된 자유 발언만 이어졌다.

5. 9월 30일(금) 국감 다섯째, 파행 및 반쪽 국감계속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등의 상임위는 오늘도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법사위의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간사가 국회법에 따른 사회권 이양에 따라 국감을 개의회했지만 피감기관인 특별감찰관실 증인들이 국감장에 참석하지 않아 감사가 중지됐다.

안전행정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무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24개 기관, 기재위는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여당 소속의 위원장들과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이밖에,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오늘도 야당 단독 국감이 진행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야당 의원들과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상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벌이고, 부실한 지진 대응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도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수공이 4대강 사업을 하며 사실상 적자상태에서도 정부 등 주주에게 배당한 것과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쟁점이 됐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늘어나는 점을 지적하며, 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오류 논란과 관련해 진단서를 발급한 서울대병원 의사와 의료계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

택했다.

6. 10월 4일(화) 국정감사 정상화, 12개 상임위 국감 실시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복귀 결정으로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정상화 되는 가운데 국회는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0월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집권여당으로서 국회 운영에 참여해 국정과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뜻에 무조건 따르기 위해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정현 대표도 금식을 풀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나라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법사위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문제가,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특별시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수당 제도 등이 쟁점이 되었다.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과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소홀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규모가 커졌다고 질타했고,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서는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아 일련의 물류대란으로 이어졌다고 산업은행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해 로드맵을 갖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고, 한진해운 사태는 이미 한진해운에 6,500억 원의 외상 채무가 있는 등 부실 규모가 커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산업은행의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결정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 혈세가 들어간 국내 1위, 세계 7위의 해운사를 부실하게 만든 경영진의 책임을 지적하며, 대주주의 무책임을 질타했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막기 위해 2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기재위의 한국은행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계부채 급증으로 경제 침체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

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의 리스크에 대해 다각적으로 점검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당 의원들은 저금리 기조에 맞춰 시중은행이 수신금리를 낮추는 등 가계의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도 각각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교문위의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K스포츠 재단의 태권도 시범단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행사에 참석한 경위와 차은택 감독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과정,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산자위의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조직 ‘포럼오래’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환노위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시중에 유통되는 화학 제품의 안전성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현행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 10월 5일(수), 국방위의 ‘사드배치 부지 변경’ 쟁점 등 여야 공방

국회는 오늘 12개 상임위를 가동해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기재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여당 의원들은 노동, 금융 등 4대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당 의원들은 기재부가 재정, 통화 확장을 통한 단기 성과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조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이 전 경제부총리 시절 중소기업 진흥공단 채용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했으며 국감 증인 채택 등을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최 의원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현재 재판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맞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를 비롯한 2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팽팽했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특혜 논란, 이른바 ‘금수저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 면제와 국적 포기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이 쟁점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분쟁을 해결해야 할 법원이 전례 없이 부검영장에 제한을 뒤서 오히려 논란을 일으켰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영장은 구속력인 지닌 강제처분인 만큼 조속히 영장을 집행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원의 조건부 영장 발부를 비판하면서도, 영장에 적시된 조건대로 유족 동의 없이 수사기관이 부검을 실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현직 판사가 구속되는 등 사법부가 위기 상황에 놓였지만, 법조계는 일부 개인의 일탈행위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농해수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농협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쟁점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농협이 김 장관에게 최저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은 김 장관이 변동금리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농협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김 장관이 전체 대출자의 0.17%만이 제공받은 금리를 적용받은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지진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매일일 부재 등 정부의 부실한 대책을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추궁했다.

국토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LH가 주도한 K타워 프로젝트에 미르재단이 참여한 데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 의원들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서민주거안정 등의 국토위 이슈가 간과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8. 10월 6일(목) 정무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 실시

국회는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국정감사를 했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정부의 금융당국 부실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최근 금융권 파업을 야기한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과 가계부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통 3사 마케팅 임원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실효성과 부적절한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등을 추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는 최근 경주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를 집중 제기되었다.

한편, 10월 5일 야 3당이 고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제출한 가운데, 안전행정위의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백남기 특검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운전병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문지마 살인사건과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행 사건 등을 거론하며, 중대 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치안 서비스 강화를 주문했다.

교문위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을 앞두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9. 10월 7일(금), 교문위의 이틀 연속 파행 등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조세 환급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조세 불복 소송 폐소로 환급해 준 세금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화성 땅 차명소유 의혹과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 탈루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을 고위층과 대기업 등이 재단법인, 공익법인 설립을 통해 법인세와 증여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이 이들 법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이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부산·울산 지역에 대해 세금 납기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도 주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합동참모본부 등 7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철저히 대비를 주문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북한의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군 당국의 정보능력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은 미국의 군사협력에만 기대기보다는 자주국방을 더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영창 발언 논란과 관련한 연예인 김제동씨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국방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연예인을 출석시켜 발언을 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영상회의로 진행하였다. 국회와 세종정부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정감사는 이번 20대 국감에서 정무위가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영상 회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통일문제와 김해 신공항 건설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 집중 질의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UHD TV를 수신기 없이 시청할 수 없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미래부가 올해 7월에야 UHD TV의 기술기준을 확정하면서, 기존의 유럽식 UHD TV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수신기를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가전사들이 무료보급을 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도 국정감사에 돌입해, 국감 대상 기관들이 직면한 현안들을 점검했다.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부산항만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로 인해 부산항의 환적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협력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서 부산항의 위상이 하락하고 있는 데 대해 부산항만공사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최근 지진과 태풍에 대비해 각 지역 항만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심장질환 부작용 위험 때문에 미국에서도 판매 금지된 약물이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며 식약처의 허술한 관리망을 질타했다.

한편, 환노위는 오늘 국감 현장시찰로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사측과 노조, 협력사 임직원들을 차례로 만나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을 듣고 대안을 논의했다.